

# 야 “헌정 질서 회복 첫 걸음…이제 민생·경제 집중할 때”

이재명 “참으로 안타까운 일”…박찬대 “정의 살아있다는 사실 확인”

혁신당 “김건희 자제 범죄·내란 연관성 밝히기 위해 조속히 체포를”

### 민주당·혁신당 반응

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고,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리스크는 윤 대통령과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이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 권한대행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 오늘

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비상 대기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된 직후인 오전 6시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인 오전 11시 두 차례 의원 총회를 열어 영장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윤석열의 경제·정치·주술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자제의 범죄는 물론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조속한 체포를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를 출국금지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건희는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행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 정범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법무부에 김 여사의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는지 질의했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

##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 묻겠다”

“대통령 체포는 망신주기 목적…국격 무너졌다” 주장

### 국민의힘 반응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대동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었다. 진실규명보다 현

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하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주간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오동은 공수처장, 우중수 국가수사본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하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은 무너졌다.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분을 겁박한 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재 “정계선 재판관, 심판의 공정성 해치지 않는다”

### 尹측 기피 신청 기각 결정문 보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특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전날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결정문에 적었다.

현재는 우선 “신청인(윤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 청구인의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의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라며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

과한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이수 변호사여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다른 사유도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예단을 드러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헌법 조문을 확인했다는 내용,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언급, 현재 안보·경제·외교 상황이 어떠한지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

이라며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는 “그 밖에 신청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문제 삼거나 재판관이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고 신청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같은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것을 기피 신청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선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국힘 지역 지지자들, 탄핵 반대 거듭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되자 지역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지역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주연대’(연대)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횡포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제했다”며 “하지만 거대 야당과 몇몇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를 사유로 탄

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절차에 따라 해제했음에도 내란죄로 몰아 어느 나라에도 사례가 없는 헌정 대통령 체포를 위해 형사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헌정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듯 무리한 체포를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자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폭주, 헌정질서와 국가안보 훼손 등 범죄주

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를 위한 결단임을 인식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연대에는 국민의힘 광주 강현구(동남갑)·하현식(서구갑)·김정명(북구갑)·안태욱(광산을) 당협위원장과 당원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시당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기자회견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당협위원장 등 지지자들의 입장은 시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 “시당은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재가 법리에 맞게 판결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